

◎ 주요정당 대통령 후보 농어업분야 10대공약 비교



국민농업·통일농업 만들어 나가는 농민대통령 될 것”
대선후보 ‘한농연대선후보 초청토론회’서 약속서에 서명

▲문재인 후보=△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직
직접 나서 농어업정책 틀 전환 △물가상승률 반영
쌀 목표가격 인상 쌀 생산비 보장 △공익형 직불제
와 청년농어업인직불금 도입 △주요 농산물 생산
안정제 △100원 택시도입 농어민 복지확대 등

▲안철수 후보=△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농식품 먹거리
안전·위생·질병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 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강화 △학교급
식 확대개편, 과일급식프로그램 ‘과일닥터’ 도입 △농가소득 감소분 보조금 지급 △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 신설△농어가 생활안정 및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육성 등

▲심상정 후보=△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을 1ha당 연 300만원 지급 △GMO상업
적 개발금지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농식품부로 일원화△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금 월 1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급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동 △65세 미만
농민에게 월 20만원 지급 △논·밭 고정직불금 1ha당 연 150만원과 80만원 지원 △
농가소득 30%이상 직불금 확대 △농어업회의소 설립 △농협조합장 직선제로 선출

▲홍준표 후보=△농산물을 담보로 정부나 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을 지원해주는 방
식의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시행 △김영란법허용가액기준을 10만원·10만원·5만원
조정, 농·축·수·임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검토

한편, 농식품정책학회·경실련 ‘대선후보 농정철학·공약’ 토론“농정공약 뒷받침할 예
산계획 빠졌다”며 문제 제기(4.21자 농어민신문기사 참조)

문재인

- 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업 비서관 임명
- 물가인상을 반영 쌀목표가격 설정
- 농어업산업재해보험제도 도입

홍준표

- 청탁금지법서 농수축임산물 제외
- 정책금리 1%로 인하
- 청년농업인직불제 실시

안철수

-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신설
- 논 타작물 재배 유도 및 소득감소분 보조금 지급
- 농촌·마을 생태환경보전형 직불제 도입

유승민

- 쌀생산조정제 실시 및 공익형직불제 도입
- 후계농업인육성법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 농민의견 농정반영 및 지방정부의 농정 권한강화

심상정

- 친환경쌀직불금 ha당 400만원 및 고정직불금인상
- 농민소득 월 20만원 기초노령연금 30만원
- 45세 미만 1만명에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농관원의 유기농업자재업무 활성화방안(시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농업자재업무이관에 따라 하위법령(고시3종)에 공시제로 일원화하되 효과 자율표시규정 마련 및 허용물질선정위원회 정비, 유기자재정보시스템 이관, 공시기관 및 제품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업무 활성화방안 마련(‘17.4.21 간담회)

▲ 하위법령 제도정비

- 공시와 품질인증 통합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한 고시 개정안
 - 공시제로 통합 효능 자율표시 : 2년간 2개이상 시험성적제출 약해없어야 함 병해충관리용 방제가 50% 이상, 토양개량.작물생육용 무처리와 유의차인증
 - 허용물질선정 절차, 사후관리 규정, 시스템 관리규정 등
 - 유기농자재 정보시스템 이관 고도화 : 친환경인증정보관리시스템으로 이관
- 허용물질 선정 관리
 -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3개) 구성, 허용물질 안전성 검증 및 재평가시스템
 - 농가 자가제조.사용 허용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안전성검사 실시
- 공시기관, 시험연구기관 관리 : 공시기관 지정 적정 수 관리 및 전문가육성
 -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사후관리 강화 : 연 1회이상 수시점검

▲ 품질관리 내실화

- 분석방법 개선 : 다성분 320종성분(식약처고시), 3년간 검출성분 필요시 추가
- 중금속, GMO는 자체검사, 주성분 위탁검사 * 장기적 농관원자체검사 추진
- 유기농업자재 공정 분석방법 개발 R&D 추진(‘18년~20년, 15억)

▲ 공시제품 농가선택권 확대

- 공시제품 현장의견 및 품질정보 제공 : 선호도조사 제품정보 제공 DB화
- 공시제품 적정가격 유지 : 가격 적정성 검증, 유사제품 가격비교 인하 유도

▲ 공시확대 및 지원강화

- 허용물질 확대, 표준사용방법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 실시간 공시 및 행정처분 내역 등 정보 제공
- 사후관리 및 허용물질관리 예산요구(‘18 1239백만원) 및 홍보용 교재 제작

▲ 공시제품 사후관리 강화

- 공시사업자 생산유통과정 관리강화 : 공시유효기간내 2회이상 현장조사
- 공시취소 등 부적합제품 생산사업자 전수조사(연 1회)
- 농자재판매상 전수조사(연 1회), 주성분 분석기관 위탁검사(‘17 200점)
- 유기자재 용어사용 등 과장광고 표시사항 적정여부 일제조사(연초 1회)
- 대두박, 채종박 등 GMO 우려 원료검증 및 생산이력관리 체제구축

● 비료 비용절감 T/F 추진계획

비료비용 절감 국회 토론회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전문가 T/F를 구성 해결방안 모색회의가 4.18 농식품부 창조정책관 주재로 농식품부, 농진청, 농과원, 농관원 등 관련기관 및 협회관계자 등이 모여 회의 하였으나 뚜렷한 개선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추후 계속 토의하기로 함

▲ 문제 제기(국회 토론회시)

-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통합 전산관리(농경연 강창용 박사)
 - 폐기물은 환경부 올라로시스템, 폐기물 재활용원료사용은 농식품부 비료품질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나, 비료 사료제품으로 생산한 실적까지 통합관리
- 비료의 과장광고 차단 등 품질관리, 비료공정규격 성분보증표 등 개선필요, 보조사업 대상 품목추가 및 삭제 검토(제주대 현해남교수)
 - 비료 비용상승은 영양제, 유기농자재 등 새로운 비료가 차지하는 상승에 의한
 - 공정규격 알아보기 쉽게 개정 및 성분보증표도 원하는 정보 파악토록 개선
 - 규산질비료 중금속함량 낮게 기준개선 및 생석회, 소석회, 부산석고 비중추가
- 농업인 비료사용 지도교육필요(한농연 김승식부회장)
 - 신제품출시시 업체홍보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 안됨(가격, 과장광고)
- 양분 총량관리를 위한 비료업무 추진(이완주 의원)
 - 작물별 적정비료 사용량 매뉴얼 마련 및 맞춤형비료 등 사용량 절감추진

▲ 토론 결과

- 각 T/F팀별로 현안 문제점 해결 및 과제 개선에 노력하기로 함
- 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수출팀 : 수출입 현황, 애로 건의사항 수렴 총괄창구 마련 수출확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함
 - 토양개량제 지원 비료종류 조정을 검토하기로 함
- 품질관리 강화팀 : 과장광고 차단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 리플릿 등에 광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중이므로 향후 교육실시
- ※ 당회 : "협회 유기농자재 및 비료 과대광고 및 표준용어 가이드라인" 제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수차 검토 했으나 본 가이드라인에 의할 경우 아무 문제 없음을 설명
- 공정규격 개정팀 : 비료공정규격 개정(용역사업), 지자체공무원 전문역량강화 미량요소복비 등 비료공정규격 현실화하되 지재권 문제 추가검토
- 교육 홍보강화팀 : 생육촉진효과자재 올바른사용요령 등 적정비료사용교육

◎ 차기정부 친환경농업 정책제안 토론회



차기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많은 친환경농업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농업학회와 농어민신문사 주관으로 4월 7일 서울 aT센터에서 진행됐다. 불합리한 친환경농업 정책개선을 위한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 호(단국대학교 교수) "육성보다 규제만 강화 문제"

유기농업 철학과 원칙 경시, 법률과 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 중간유통업자에 의한 대중지향형 마케팅과 공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자재 사용 증가, 안전성을 담보로 한 이윤지향도 문제다. 대기업은 유기농식품을 적극 수입했고 유통 대기업은 물질적·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 법 제도는 친환경농업 육성보다 관리와 규제만 강화했다. 합성화학물질 사용금지, 자연적 자재사용, 유기물 토양환원, 생태계 물질순환 균형이 요구됨.

▲최덕천(상지대학교 교수) "친환경, 유기 개념으로 개정"

친환경농업법에서 '친환경'을 '유기'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 저탄소농업 연계 유기농업 중심, 가족농·순환·협동의 원칙 도입도 필요하다. 자원순환형 유기농업 다품목 작부체제로 재정비하고 유기축산 육성사양 및 축분뇨 자원화 정보시스템 보급도 필요함.

▲박종서 (전친농 사무총장) "친환경·유기 중심 농정 재편"

관행농업위주의 체계를 유기농업 육성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 지대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친환경농업국 설치도 필요하다. 친환경무상급식 안정화와 기초·광역 급식지원센터 설치 명문화, 보육에서 초·중·고까지 전 교육과정으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도 요구됨.

▲당회 정책제안 요지(안인 박사)

- ① 친환경유기농자재 사후관리비용 등 지원확대 : ('17) 31→ ('18이후) 200억원
- ② 유기농자재를 농식품 수출정책 지원대상에 포함 적극적 수출확대 지원
- ③ 유기농업자재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조속히 설정, 검사성분 명확히 고시
- ④ 친환경유기농자재 R&D 지원을 강화, 품질 우수제품 지원 방안 마련 등

◎ 2017 주요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중 농촌개발분야지원사업

올해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운데 농촌개발 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6개가 농업인들과 관련이 높다

(4.25자 한국농어민신문기사 발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지역 농축협 등서 구입 일부 보조 등급과는 무관하게 20kg 1400원

- 지원 자격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 농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참여 농가는 우선순위를 부여. 2016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대상 농가의 경작필지는 2017년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가축분 퇴비·퇴비. 부속 유기질비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발효시설 및 후숙 시설이 구분 설치돼 있을 경우 2개 비종을 동시에 공급가능.
- 자금 용도 : 지역농·축협, 품목농협 및 업연초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 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이다.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살포를 대행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업체 지정 시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지원 조건 : 보조(국고 800~1400원/20kg+지방비 600원/20kg 이상)+농협 지원금 등+자부담(20% 이상). 지원 단가는 국고(정액지원)의 경우 유기질비료가 등급에 무관하게 20kg 1400원. 부속 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이다. 지방비는 20kg 기준 600원 이상 정액으로 의무 부담한다. 단, 시·도 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20kg 600원 이상 지원하는 경우 추가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

▲토양개량제지원 사업

논토양 유효규산 함량 157ppm 목표, 규산 부족한 논·화산회 토양 밭 토양검정 토대 지원기준 산정

▲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민간 경영기술컨설팅비 일부 지원, 총 출자금 1억 이상 법인경영체, 후계농업 경영인·귀농인 등 대상

▲귀농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

농업창업 지원 대상 만 65세 이하, 주택 관련 지원은 연령제한 없고, 농업 창업자금 한도 세대당 3억 지원

▲신기술보급사업

신기술 시범사업 포장 교육장 활동, 농민 관찰 용이한 단지·마을 해당 사업당 최대 2억5000만원 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예비 농업인·우수 농업경영인 발굴

신청연도 현재 만 18~50세 미만, 후계농업인 정착률 98.3% 목표

●농협영남자재유통센터 개장



첨단물류시스템 등 구축 농약 등 4천여 품목 취급, 농자재 구입·보관·배송통합...대량구매로 공급 단가 낮춰 연 47억 절감, 지역농협도 재고 보관 비용 덜수 있어

농협이 19일 경북 군위에 자재유통센터를 공식 개장했다. 영농자재를 전문취급하는 유통센터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4개 권역에 들어설 자재유통센터는 농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해 지역농협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면적 5700평 부지에 2300평 규모의 농자재 창고와 첨단물류시스템 등을 갖췄다. 농약과 시설자재, 소형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 등 4000여가지 품목을 취급한다. 수요가 많은 품목을 우선 취급하되 향후 모든 품목으로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자재 대량 구매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매한 물품을 보관·배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협은 이같은 방식으로 영남권 농자재 계통 공급액을 2017년 200억원에서 2020년 630억원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시작으로 2018년 중부권(경기 안성), 2019년 호남권(전남 장성) 및 제주권에 농자재유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실용화재단, 익산시 청사이전 기공식 및 성과발표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익산시에 조성되는 이전청사 기공식을 지난 7일 개최하고 13일에는 특허기술이전 성과발표회도 개최 재단을 홍보했다. 농촌진흥청, 익산시, 시공사, 재단 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재단의 청사이전을 기념했다. 류갑희 재단 이사장은 "익산 이전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 성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 농업인과 농산업체에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재단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재단은 올해 누적 일자리 창출 820명, 제품매출액 800억 원, 사업화성공률 40.6%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의 사업화성공률은 2010년 16.1%에서 2016년 36.9%까지 성장했으며, 지난 6년간 지원제품 매출은 6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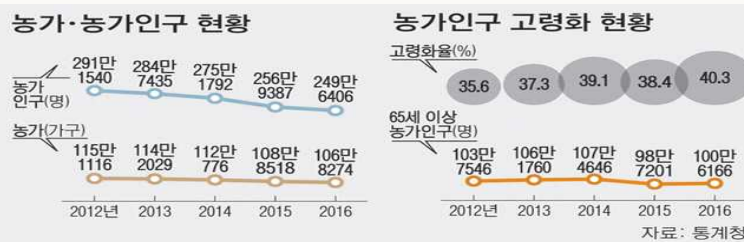
●농식품부, 롯데슈퍼·충남도와 손잡고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한다.

농식품부, 롯데슈퍼, 충청남도과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17.4.12.)
농식품부는 롯데슈퍼-친환경단체의 유기농산물 소비확대 업무협약을 `15년5월 체결한데 이어 농식품부, 롯데슈퍼와 「건강한 밥상*」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로 친환경농산물과 연계한 CSV사업** 추진하여 청년층을 농업으로 유도 한다.

* CSV(Creating Shared Value) : 공유가치창출, 기업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경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롯데슈퍼의 자금출연(50억원)과 충청남도의 교육 및 정착기반지원을 통해 「청년창농+실명제+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추진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롯데슈퍼와 롯데마트전점에서 브랜드화 하여 판매 할 예정이다.

◎2016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사질 사람이 없다.

3농가중 1농가, 농사로 생계 못 꾸린다. 농가인구 250만 붕괴 이어 농가수 100만 무너질 위기, 노인인구 1만9천명 늘고 70세 이상 경영주 39% 달해



통계청의 '2016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인구는 250만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농가수는 100만가구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

명이 노인으로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65세이상은 전체 농가인구의 40.3%, 70세이상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39.4%나 차지했다. 20세 미만 인구가 10%를 밑돌고, 2인가구와 영세농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4.8%이며, 영세농이 전체 농가의 절반에 육박하고 농가 3곳 중 1곳은 이미 농사가 부업으로 전락 농사질 사람이 없다(농민신문 4.19자)

◎농축산물 소비절벽...탈출구 안보인다

경기침체·김영란법·수입농산물 범람 '3재' 탓

완연한 봄이 됐지만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분다. '경기침체·청탁금지법(김영란법)·수입 농축산물 증가'로 요약되는 3대 한파(악재)가 불어닥친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초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한육우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비절벽'이란 탄식까지 유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대로 라면 가격 폭락을 불러와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최근 농축산물의 소비부진은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며 "1998년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팔린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농민신문 4.17자)

◎인삼 잔류농약 분석법 대폭 개선

농관원, 분석 가능성분 189→323개로 늘어, 잔류량도 측정할 수 있어...수출 비관세장벽 대처 수월해질듯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동시분석가능한 인삼류(수삼·백삼·홍삼) 잔류농

약성분이 기존 189개에서 323개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삼 잔류농약은 인삼 자체 유효성분의 방해로 189개 성분까지만 분석이 가능했으나 개선된 기법을 통해 분석 시간과 비용 모두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번 분석법 개선으로 인삼 주요수출국의 간간한 비관세장벽에 효과적 대처가 가능해진다. 미국·유럽·일본 등은 자국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농약에 대해 불검출 혹은 0.01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용의약품 藥事감시 효율성 제고방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외)품 현장 이슈 선제적 대응, 전문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藥事)감시* 효율성 제고방안'을 수립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동물용의약(외)품 업체 및 품목수 증가, 방역용 소독제 효력문제 등 각종 이슈가 축산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획일화된 점검방식에서 탈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약사감시로의 체계 개편이 불가피 하였다. 이번 약사감시 효율성 제고방안은 ▲업체별 차등관리제 ▲현장이슈 선제대응을 위한 기획감시 확대 ▲감시반 전문성 확보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 수출 현황 : 834억원(2010) → 1,670억원(2013) → 2,745억원(2016)

* 품목수 현황 : 9,278개(2010) → 11,209개(2013) → 14,090개(2016)

◎첨단 기술 융합 통한 농업농촌의 4차 산업혁명 본격착수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은 4월 20일 농촌진흥청에서 주요기관 간부 50여명이 참석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연찬회'를 개최 본격준비에 착수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 팜 등 핵심 분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농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마련(4월)에 따라 5월 중에 농업생산유통농촌바이오 등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및 농경연, 농협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유관기관 4차 산업혁명 대응 TF'를 조직하여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FMC, 듀폰(DuPont)의 인독사카브 등 농약사업 인수

최근 FMC는 듀폰의 농약 사업 일부를 인수하고, 듀폰은 FMC의 헬스&뉴트리

선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셔서 올말까지 사업 인수에 대한 마무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짐.

이는 '다우-듀폰(Dow-DuPont)'의 합병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가 농약 사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FMC는 듀폰의 레낙사필(Rynaxypyr, '알타코아'), 시아자필(Cyazypyr, '토리치'), 인독사카브(Indoxacarb, '암메이트')로 구성된 선택성 살충제 및 듀폰의 광엽 제초제도 가져온다. FMC는 이번 인수로 듀폰의 미국 델라웨어 작물보호 연구본부 등 14개 R&D 기지와 북미·중남미·아메리카·유럽·아시아 지역 10개의 제조설비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했으며, 듀폰이 개발중인 15가지 살충제·제초제·살균제 합성물질과 연구인력도 FMC로 이관된다. FMC-듀폰간 M&A가 완료되면 FMC는 연간 38억달러규모의 세계 5위권 농약기업이 되며, 매각관련 한국지사 정리는 내년가서야 완료될 방침이다.

●검역본부, 새로운 해충 소독 기술 개발

-질소가스병용처리(EF+N₂) 기법개발 소독비용 50% 절감 효과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간 친환경 해충 소독기법 개발을 추진해온 바, 공기 중에 흔하게 존재하는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현행 에틸포메이트 방식에서 병용처리(EF+N₂)하는 방식으로 소독기법을 전환함으로써 소독처리 비용이 50%이상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본 병용처리 기술은 오렌지 해충인 깍지벌레 등에 효과가 탁월하여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었고, 세계경제곤충학회지(Journal of Economic Entomology)에 논문 투고 예정이다.

●제12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



= 종자,묘목, 증고차량기계류 등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병해충 위험 경감 관리방안5건, 과실, 목재 등 소독기준 표준화 10건 국제 식물 검역기준 15건 채택 =

지난 4.5.(수)~11.(화)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12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가 전 세계 118개국 식물검역 정부 대표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국제 식물검역기준 15건*을 상정 채택하였으며, 식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2020년 『UN 세계 식물보호의 해』제정**과 관련한 향후활동방향도 설정하였다

[기타 소식]

●16 종자업 실태조사결과 국내 민간 종자시장 5,000억 수준

종자업체의 종자 판매액은 5,008억원으로 조사, 종자판매액 중 국내 판매는 4,414억원(88.1%), 해외수출은 564억(11.3%), 해외생산판매는 29억(0.6%)으로 조사됨

●(주)대유, 창사 40주년 기념행사

(주)대유(회장 권옥술)가 지난 6일 창사 40주년을 맞아 임직원 70여명은 경기도 남양주 체육공원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지난 4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40년에 대한 각오를 새로이 다졌다.

●과수 '화상병' 예방 적극 나서야 ..농진청, 동제화합물 활용 제때 방제 당부

= 15년 국내 처음 발생 2016년까지 안성, 천안, 제천에서 약 80ha의 과원에 피해.

●농촌진흥청, 감귤 과원 전용 무인 약제방제기 개발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서 개발한 무인 소형 SS기는 무인으로 밀식된 감귤 과원을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으며 또한 원거리에서 무선 리모콘을 이용해 살포하므로 작업자가 약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 안전성이 높다.

●농업 6차산업화' 유럽 연수 5월10일까지 참가 접수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농정원과 손잡고 '2017년 유럽 농업의 6차산업화 벤치마킹 국외연수' 대상자 20명을 모집한다. 6월14일부터 21일까지 독일·네덜란드 등 6차 농산업 사례를 집중둘러본다. 연수비용 410만원중 자부담은 절반이다.

● 제1차 한중일 6차산업 국제세미나

期间 : 2017年6月19-23日 , 地点 : 杨凌-西北农林科技大学

중국원과기부차관 일본원농림수산성 차관 참가, 한국-aT, 한친농

한국6차산업소개 60분(각 주요대표 주보고시간 60분, 한국대표: 약 30분)

● 한친농, 베트남 방문 기술이전 협력 및 기업매칭 워크숍 참석

베트남 과학기술부 및 베트남 농업협회 주관 한국의 비료, 종자, 수확 후 관리, DHC,Taurine 기술이전 협력 및 기업 매칭 세미나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한친농 안인박사가 참석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장관과 농업청장이 참석, 중소기업청, VTTC,SATI, 과학기술이전 연구소 및 센터 등 베트남 농업관련 기관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추후 진행사항을 별도 보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 산업현장·영농현장의 기술수요조사

참여분야 :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생산, 소비, 식품, 가공, 에너지, 유통, 환경, 정책지원 등 농업관련 전 분야에 필요한 기술

나. 조사기간 : 2017. 4. 18. ~ 2017. 5. 7(20일)

다. 제출방법 ○ 홈페이지 : <http://atis.rda.go.kr>